

- 농업환경의 열악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과 농업생산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상환기간으로 대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상호금융구조를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거치기간을 둔 장기분할상환구조로 전환해야 함.

- 연대보증으로 인한 선량한 농가의 동반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 또는 영농조합의 파

산절차시 강제집행은 본인재산에 국한하고 연대보증을 선 농민들의 보증책임은 면제하는 것이 필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와 같이 국가부담으로 해야 함.

- 누적되어온 연체이자를 감면 조치하고 상환곤란한 이자분을 대출원금으로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함.

- 국회차원에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농가경영안정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업금융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하며 농업의 경제외적 가치와 농업의 수익률에 기초한 농업환경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義豚**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한농연의 대책안

상호금융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황 창 주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단체와 농림부, 농수축협이 구성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가부채는 28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한 농가당 평균 2,004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60세 이상 농가를 제외한다면 약 2,7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책자금과 농축협 상호금융, 중앙회자금, 농축협 경영자금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채와 농촌신협,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농가부채에 농업인들은 시달리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12조 6,94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율이 16.5%로 매년 이자부담만 2조 945억 원에 달하여 농가부채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농업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정책자금 인하 요구에 의해 IMF이전 금리인 5%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합의는 되었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농가부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농림부와 농협은 완강하게 상호금융의 금리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14% 금리도 나타난다. 여기에 농축협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합쳐진다면 상호금융 금리의 5%로의 인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농업분야 정책은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확한 사실이다. 농가부채대책은 '한국농업의 생산기반 파괴방지', '농가파산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파괴 방지', '식량안보수호를 위한 영농의욕 유지'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목표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농가부채대책이 수립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농림부와 농축협, 학계가 상호금융에 있어서 금리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부채대책 수립이 지연되면서 98년 하반기 상환농가를 비롯하여 대다수 농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급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한 감수와 지속적인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농업위기를 막고, 농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와 금리인하조치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의 상환유예와 금리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상호금융의 2년 연장과 상호금융대출금리의 10%로의 인하를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업인단체와 합의하여

5% 인하를 주장해 왔다. 이 정도의 상호금융대책은 이루어져야 미흡하나마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인 정서에도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14% 금리도 나타난다. 여기에 농축협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합쳐진다면 상호금융 금리의 5%로의 인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농업분야 정책은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확한 사실이다. 농가부채대책은 '한국농업의 생산기반 파괴방지', '농가파산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파괴 방지', '식량안보수호를 위한 영농의욕 유지'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목표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농가부채대책이 수립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농축협은 기본

적으로 농업인이 살아야만 유지되는 농업인의 협동조직이다. 농축협은 그동안 농축협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농업인들의 눈총이 따갑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번 농가부채 대책에서 만큼은 상호금융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축협으로 거듭 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농축협이 협소한 시각으로 '경영주의'에 빠져 농가부채문제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하다면 농업인들의 거센 반대와 '농축협 개혁운동'을 자초할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농가부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일어서야 한다. 제대로 된 농가부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온 농업인이 힘을 모아 농업인단체가 제시하는 농가부채대책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養豚**